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 동아시아로부터의 증거*

박종민**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확대된 신뢰의 근원에 초점을 두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시아바로미터 3차 조사 자료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정부제도의 질의 역할이 모두 제한적이며 특히 사회자본론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 패턴 내에서 정부의 준법성은 대체로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정부를 담보해 주는 정치적 문책제도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증거는 법치주의 특히, 준법정부의 존재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일반화된 신뢰, 사회자본, 국가제도의 질

I. 머리말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결여된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 질문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이나

*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한다. 이 논문은 2012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 및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일부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2012S1A3A2033282).

** 미국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의 질, 정부신뢰, 비교정부론 등이다(cmpark@korea.ac.kr).

이를 구축하려는 정책결정자들 모두에게 중요한 퍼즐이다. 낯선 사람들에게 범위가 확대된 일반화된 신뢰야말로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업적 집합행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Putnam 1993; Fukuyama 1995). 토크빌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으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단체의 사회화 역할에 주목하였다. 사회 중심적 시각은 단체나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은 신뢰, 관용,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행태의 “마음의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Newton 2001). 이러한 시각과 대비해 국가 중심적 시각은 낯선 사람들의 신뢰성 및 사회적 환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일반화된 신뢰의 또 다른 근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Hooghe and Stolle 2003). 본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국가제도의 성과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상대적 영향을 분석하면서 두 시각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연구는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에 있어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모든 제도가 동일하게 중요하지 혹은 제도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는 제도성과의 유형을 정부의 질과 그러한 정부의 질을 간접 담보할 수 있는 문책제도의 질로 나누고 이들과 일반화된 신뢰 간의 관계를 구분해 다룬다. 본래 일반화된 신뢰는 집합수준의 개념으로 신뢰형성의 이론을 개인수준에서 직접 테스트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이론이 갖는 개인수준의 기제와 함의에 초점을 두고 정부 및 문책제도의 질이 동료시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독자적 영향을 분석해 일반화된 신뢰 형성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평가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사회신뢰의 유형 가운데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인 일반화된 신뢰의 특징을 다룬다. 둘째 부분에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으로 기존에 강조되었던 자발적 단체와 최근 강조되기 시작한 국가제도가 어떻게 신뢰를 낯선 사람들에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 미시차원의 연결기제에 관해 논한다. 셋째 부분에서는 분석에서 사용될 설문자료와 변수측정을 다룬다. 넷째 부분에서는 정부 문책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는 영향과 비교한다. 마지막 부분

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다룬다.

II. 일반화된 신뢰

본 논문에서 종속변수로 다루어지는 신뢰 유형은 특정적(particularized) 신뢰와 구분되는 일반화된(generalized) 신뢰이다. 우리가 이 유형의 신뢰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정부신뢰, 참여, 투자와 성장 등 다양한 정치적 및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strangers)에게 확대된 신뢰이기 때문이다 (Brehm and Rhan 1997; Knack and Keefer 1997). 사회자본의 개념을 유행시킨 Putnam(1993)은 “신뢰, 네트워크 등 조정된 행동을 촉진하여 사회의 능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을 사회자본이라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신뢰는 마피아조직 등 지배-의존의 수직적 사회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정적” 신뢰와 구분된다. 그에 따르면 수직적 네트워크에서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공동문제를 위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거나 지속시킬 수 없다. 그가 변호한 신뢰는 평등한 개인들 간의 수평적 사회관계에서 형성되는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토대를 둔 신뢰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일반화된 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 등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지식이 있는 특정 개인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일반에 대한 믿음이다(Levi 1998; Newton 1999). 이러한 유형의 신뢰는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결여된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이러한 유형의 신뢰야 말로 관용, 자선, 연대를 촉진하고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산인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신뢰 유형을 제시하나 신뢰성 정보에 근거한 신뢰와 그러한 정보와 무관한 신뢰로 대분될 수 있다. Yamagishi and Yamagishi(1994)는 일반적(general) 신뢰와 지식기반(knowledge-based)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지식기반 신뢰는 특정대상(사람이나 조직)에 국한된 것인 반면 일반적 신뢰는 인간의

박애본성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식기반 신뢰는 구체적인 개인들 간에 이루어진 과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특정적 신뢰와 유사하다면 일반적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선의를 기대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신뢰에 가깝다.

Newton(1999)은 두터운(thick) 신뢰와 얇은(thin)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두터운 신뢰가 동일 부족, 계층 혹은 민족의 사람들이 서로 빈번한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얇은 신뢰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전자는 강한 유대관계(strong ties)에 그리고 후자는 약한 유대관계(weak ties)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Granovetter 1973). 두터운 신뢰는 내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특정적 신뢰와 유사하고 얇은 신뢰는 외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로 일반화된 신뢰에 가깝다.

Sztompka(1999)는 일차적 신뢰와 이차적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일차적 신뢰는 신뢰대상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의존한다. 신뢰성 판단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대상의 명성, 성과, 외관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신뢰대상이 소유하는 특성이다. 이차적 신뢰는 신뢰대상의 행동이 일어나는 외부 맥락과 관련된다. 신뢰대상의 행동을 보다 신뢰할만하게 만드는 맥락에 의존하는 것으로¹⁾ 이는 신뢰대상이 소유한 특징들과는 무관하다. 단체참여를 통해 회원들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가 일차적 신뢰라면 정부제도의 작동으로 낯선 사람들에 대해 갖게 되는 신뢰는 이차적 신뢰에 가깝다.

Uslaner(2002)는 전략적(strategic) 신뢰와 도덕적(moralistic) 신뢰를 구분하고 있다. 전략적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신뢰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특정 개인들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근거한다. 반면 도덕적 신뢰는 신뢰대상에 대한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다. 개인의 사적 경험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전략적 신뢰는 특정적 신뢰와 유사한

1) 그는 신뢰성을 조성하는 민주제도의 기제로 문책성(accountability)과 사전위탁(pre-commitment)을 강조하는데 문책성은 신뢰성이 담보되도록 신뢰대상의 행위를 감시하고 신뢰가 위반될 때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작동을 의미한다면 사전위탁은 신뢰대상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맥락을 고쳐 행동의 가변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신뢰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Rose-Ackerman(2001)은 신뢰 유형을 대인관계 및 생성과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먼저 대인관계의 차원에서는 “특정한 대인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태도의 일부”인 일반화된 신뢰, 甲의 乙의 신뢰성 추정에 기초한 일방적 신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타내는 신뢰성에 기초한 상호적 신뢰를 구분한다. 반면 생성과정의 차원에서는 신뢰성의 명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통해 생성되는 被覆이익(encapsulated interests)기반 신뢰,²⁾ 과학이나 다른 형태의 전문성에 기초한 예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성되는 전문가기반 신뢰,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다루는 절차 준수를 통해 생성되는 규칙기반 신뢰,³⁾ 애정이나 우정을 통해 생성되는 정서기반 신뢰, 신뢰성을 도덕적 의무라 간주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도덕성기반 신뢰를 구분한다.

이처럼 신뢰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적 신뢰, 지식기반 신뢰, 두터운 신뢰 혹은 전략적 신뢰와 구분되는 일반화된 신뢰에 초점을 둔다. 우리가 이처럼 신뢰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신뢰 형성의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화된 신뢰는 말 그대로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포함하는 반경이 확대된 신뢰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화된 신뢰는 지식기반 신뢰나 전략적 신뢰와 구분된다. 신뢰대상 범위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화된 신뢰는 특정적 신뢰보다 범위가 넓다. 사회협동과 집합행동을 촉진시키는 윤택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는 사람들 혹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신뢰가 아니라 만나 본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화된 신뢰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Gambetta(1988)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유익한 혹은 적어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기

2) Hardin(2001)은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신뢰를 피복이익의 표현으로 보는데 이는 신뢰의 도덕적 근원을 강조하는 Offe(1999)나 Uslaner(2002)의 시각과 대비된다.

3) 이 유형의 신뢰는 국가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명성이 개인들로 하여금 익명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Levi and Stoker 2000).

때문이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할 것인지 의심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뢰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며 이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화된 신뢰의 경우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경험과 정보를 통해 대상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화된 신뢰는 그것의 형성 기제가 특정적 신뢰나 전략적 신뢰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된 두 가지 관점을 논의한다.

Ⅲ.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

일반화된 신뢰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개관한 후 Nannestad(2008)는 4개 설명 유형을 확인하고 있다. 자발적 단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시민사회 중심 설명, “좋은” 국가제도에 초점을 둔 국가 중심 설명, 세계관과 가치관을 강조한 문화론적 설명 그리고 민족적 혹은 언어적 이질성에 초점을 둔 사회구조적 설명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처음의 두 설명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설명과 국가제도에 기반을 둔 설명만을 다룬다(Stolle 2003; 박종민·김왕식 2006).

1. 시민사회 중심 설명

사회 중심적 시각은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있어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자발적 중간단체의 역할에 주목한다. Tocqueville(1956)은 자발적 단체가 시민덕성을 함양하는 것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지적 전통에 따라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과 관련하여 자발적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Putnam(1993)은 자발적 단체가 대인신뢰를 생성하고 시민관여를 조장하여 민주제도의 반응성과 효과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들은 단체가 입과 활동을 통해 신뢰, 관용, 상호성 등 사회적 행태의 “마음의 습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화된 신뢰가 자발적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대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찾는다는 의미에서 사회 중심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론에서 강조하는 중간단체는 평등한 개인들 간에 결사된 자발적인 단체들이다. 단체의 조밀한 네트워크는 반복된 상호작용을 수반하는데 합리적 교환과 신뢰성의 경험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회원들 간의 대인신뢰와 협력경험은 파급효과를 갖는데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면 이는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확대된다는 것이다(Putam 2000).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신뢰하게 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없다. 경험을 통해 대상의 신뢰성에 대한 증거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특정적 신뢰 혹은 내집단 신뢰로 일반화된 신뢰 혹은 단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와는 다르다. 여기서 퍼즐은 우리가 단체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어떻게 확산 혹은 전환될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ohen(1999)은 자발적 단체에서 생성된 대인신뢰가 어떻게 일반화되는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질적인 이해관계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에 가입해 대인신뢰를 형성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낯선 사람들을 더 신뢰할 것이라고 기대할만한 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개인들이 단체생활을 통해 협력의 이득을 알게 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판단 정보가 없는 다른 대상들도 일단 신뢰하고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입증될 때까지 협력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복죄수게임에서처럼 단체생활에서 얻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도 신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이 이질적인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상호 교차하는 여러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 협력경험을 통해 신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단체 성격 혹은 교차단체 가입 수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과연 단체생활을 통해 생성된 대인신뢰가 동료시민들에 대한 신뢰로 확산되는가는 경험적인 연구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체가입과 사회접촉

등 사회적 네트워크 관여가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2. 국가제도 중심 설명

국가 중심적 시각은 일반화된 신뢰의 근원을 정부제도에서 찾는다. Cohen(1999)은 단체 내에서 생성된 상호성의 형태와 신뢰가 그 단체의 경계를 넘어 확산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인신뢰가 일반화된 상호성으로 전환되려면 사적 신뢰나 유대가 법과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파성과 자의성을 제한시키는 절차적 공정성, 불편부당성, 정의와 같은 법 규범이 국가구조의 토대가 되어야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화된 신뢰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Offe(1999)도 제도가 일단의 규범에 따라 작동할 때 신뢰가 생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신뢰 형성과 관련된 제도의 규범을 진실(truth)과 정의(justice)로 보고 제도가 이들 규범을 구현할 때 일반화된 신뢰가 발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제도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진실을 진술하는 덕목을 지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규범에 대한 위반을 감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한도에서 신뢰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제도가 행위자들로 하여금 약속준수 특히 계약존중의 덕목을 지지하도록 하는 한도에서 특히 정당경쟁과 경쟁선거를 통해 정당이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도에서 신뢰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제도가 공정성, 불편부당성, 중립성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신뢰의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조건과 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제도를 통해 연대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그는 제도가 진실과 정의의 기준을 실천하고 있고 행위자들에 대해 이러한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식될 때 제도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료시민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모두가 이들 기준에 따라 작동하는 제도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ztompka(1999: 139-143)는 민주제도의 원리는 불신의 제도화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 하에서 신뢰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불신을 제도화하는 민주제도의 원리는 첫째 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정당성의 원리,

둘째 치자의 자발적 권력 이양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온 주기적 선거와 임기의 원리, 셋째 제도의 권력 남용의 경향에서 나온 권력분립의 원리, 넷째 시민과 제도의 자생적 선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원리, 다섯째 입법기구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입헌주의와 위헌심사의 원리, 여섯째 법집행 및 중재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적정과정의 원리, 일곱째 당국의 자생적 선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시민적 권리의 원리, 여덟째 시민들의 자생적 준범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법집행의 원리, 아홉째 당국과 시민들의 진실성과 이견수용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개방적 소통의 원리, 열째 관료제 및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행정기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공동체 정치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원리들은 사회조직의 규범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구축해 준다고 하면서 그는 “사람들은 ... 사회조직이 신뢰가 위반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면 ...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신뢰할 준비가 더 되어 있다.”고 하였다.

Rothstein(2005: 121)은 정부의 질 가운데서 정부부패를 사회신뢰와 연결시키고 있다. 부패한 정부가 어떻게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추론 기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공직자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즉, 만일 공직자들이 편파적이고 부패하다고 알려져 있다면 시민들은 법에 따라 국민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들조차 신뢰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사람들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즉, 편파적이고 부패한 공직자들이 많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패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즉, 부패한 공직자들이 많다면 설사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신 역시 부패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처럼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Levi(1998)는 법질서 국가기관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일반화된 신뢰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적 요인을 크

게 둘로 구분한다. 첫째는 부패하지 않고 준법하고 투명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질 높은 “좋은” 정부의 존재이고 둘째는 그러한 정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문책 제도의 작동이다.

IV. 자료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제3차 아시아바로미터조사(Asian Barometer Survey III)에서 나온 것으로 동아시아 10개국(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의 전국표본 설문조사 자료이다. 각국의 설문조사는 대만(N=1,592), 필리핀(N=1,200), 몽고(N=1,210) 싱가포르(N=1,000), 태국(N=1,512)의 경우 2010년, 한국(N=1,207), 인도네시아(N=1,550), 일본(N=1,880), 말레이시아(N=1,214)의 경우 2011년, 캄보디아(N=1,200)의 경우 2012년에 각각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을 2개의 레짐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당시 Freedom House의 자유 수준 평가를 고려하여 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캄보디아는 일당독주의 권위주의 국가군으로 각각 구분하였다(Levitsky and Way 2010).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반화된 신뢰는 두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두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⁴⁾ 둘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⁵⁾ 응답범주는 “①매우 동의, ②조금 동의, ③별로 동의 안함, ④

4) 이 문항은 대인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사용되지만 두 개의 선택지가 동일한 차원 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앞의 선택지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면 뒤의 선택지는 사회적 삶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이 문항은 첫째 문항과 달리 신뢰하는지(trust)가 아니라 신뢰할만한지(trustworthy)를 질문

전혀 동의 안함”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일반화된 신뢰의 3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이들 문항을 사용해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Delhey et al. 2011).

본 연구의 영향변수는 크게 3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정부제도 관련 변수 군, 둘째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 군, 셋째는 통제변수 군이다. 정부제도 관련 변수 군은 다시 둘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좋은 정부”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들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정부”를 담보하는 문책제도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들이다.

제1변수 군에 속한 정부의 질 변수들은 정부의 반부패성, 준법성(투명성 포함) 및 비차별성 성과 평가이다. 첫째 정부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중앙정부 공직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뇌물수수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거의 아무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 ②일부만이 부패하다, ③상당수가 부패하다, ④거의 모두가 부패하다.”이다. 둘째는 “정부가 부패를 단속하고 뇌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최선을 다하고 있다, ②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③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④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정부의 준법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정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주 법을 어기거나 권력을 남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항상 어기거나 남용한다, ②자주 어기거나 남용한다, ③가끔 어기거나 남용한다, ④거의 어기거나 남용하지 않는다.”이다. 둘째는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자주 국민에게 감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하고 있고 있다. Hardin(2001)는 신뢰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대방을 신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가 얼마나 신뢰할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으며 신뢰성이 확인되면 신뢰가 유지되나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철회된다는 것이다.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항상 감춘다, ②자주 감춘다, ③가끔 감춘다, ④거의 감추지 않는다.”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정부의 비차별성을 측정하기 위해 동의-부동의 형태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른 민족 혹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민도 정부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부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제1변수 군에 속한 문책제도의 질 변수들은 선거공정성, 수직적 문책성, 수평적 문책성 성과 평가이다. 첫째, 선거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서로 다른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자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항상 제공한다, ②자주 제공한다, ③가끔 제공한다, ④거의 제공하지 않는다.”이다. 둘째는 “선거 때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둘째, 유권자인 시민들의 정부통제 측면을 강조한 수직적 문책성을 측정하기 위해 동의-부동의 형태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국민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부를 바꿀 힘이 있다.” “선거 때 말고는 국민이 정부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셋째,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통제 측면을 강조한 수평적 문책성을 측정하기 위해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정부지도자가 법을 어겼을 때 사법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둘째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할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응답범주는 “①많이 있다, ②약간 있다, ③별로 없다, ④전혀 없다.”이다.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단순 합하여 7점 지표를 구성하였다.

제2의 변수 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네트워크 관여 수준을 반영하는 단체가입과 사회접촉 변수가 포함되었다. 첫째, 단체가입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가입한 단체의 이름을 중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열거하도록 하였다.⁶⁾ 응답은 단체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입단체의 수에 기초해 가입한 단체가 하나도 없는

경우, 가입단체가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가입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무가입자, 단수가입자, 복수가입자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둘째, 사회접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직접 만나서 혹은 전화, 편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평일 하루 평균 몇 명인지”를 질문하였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만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①0-4명, ②5-9명, ③10-19명, ④20-49명, ⑤50명 이상”이다.

끝으로 제3의 변수 군인 통제변수에는 성, 연령, 교육, 소득 등 전형적인 인구 사회학적 변수가 포함되었다.⁷⁾ 통제 목적 이외에도 특히 교육과 소득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가 승자의 특권인지에 대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Newton 2001).

V. 분석결과

<표 1>은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국가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동의 혹은 조금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퍼센트를 보면 사람들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인식은 흔히 고신뢰 사회로 간주되는 일본에서 가장 높았고 대만, 한국, 몽고, 싱가포르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응답자들의 60%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주목할

6) 이러한 질문 방식의 이점은 가입해 있는 단체 이름을 즉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 회원이거나 혹은 적어도 자신이 회원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만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방식에서는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 연령은 17-29, 30-39, 40-49, 50-59, 60+, 교육은 고졸 미만, 고졸(중퇴포함), 대졸(중퇴포함)로 각각 부호화하였다. 한편, 소득은 주관적 소득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계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저축도 할 수 있다 ②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③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좀 있다 ④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다.”

만한 것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국가인 대만, 한국, 싱가포르가 상위 국가군에 포함된 것이다(Delhey et al. 2011). 반면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단지 38%만이 동의한다고 해 사람들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학살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된 캄보디아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5명 가운데 2명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고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경우 응답자들의 과반 정도가 동의를 나타내 중간국가군을 형성하였다.

한편, 사회신뢰 측정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질문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한국에서 가장 높았고 거의 차이 없이 일본과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는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하였다. 반면 필리핀이 가장 낮았고 큰 차이 없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몽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하였다. 반면, 싱가포르와 태국은 두 국가군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4명 가운데 1명만이 그렇게 하였다.

<표 1> 일반화된 신뢰 문항에 대한 반응: 국가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만하다”에 동의한 응답자 퍼센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퍼센트	(N)
민주주의			
일본	77	39	(1,880)
한국	63	40	(1,207)
대만	68	38	(1,592)
몽고	63	14	(1,210)
인도네시아	52	33	(1,550)
필리핀	49	7	(1,200)
태국	49	26	(1,512)
권위주의			
말레이시아	38	9	(1,214)
싱가포르	61	29	(1,000)
캄보디아	41	12	(1,200)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같은 표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조사대상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다.”에 동의한 퍼센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를 선택한 퍼센트보다 높았다. 퍼센트 차이를 순서대로 보면 몽고(49%)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은 필리핀(42%)과 일본(38%)이었다. 반면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는 인도네시아(22%), 한국(23%), 태국(23%)으로 나타났으며 싱가포르(32%), 대만(30%), 캄보디아(29%), 말레이시아(29%)는 양 국가군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본성에 대한 믿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일본의 경우 다수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를 선택한 것이다. 이들 국가별 차이는 근대화의 수준, 정치체제의 유형, 문화유산의 차이, 사회적 분할정도와의 거의 무관하게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질문 내용에서 오는지 혹은 형식에서 오는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규명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뢰성과 신뢰 간의 관계는 강도는 다르나 모든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1$) 것으로 나타났다. Kendall's tau_b를 보면 한국(.442), 대만(.411), 인도네시아(.394), 싱가포르(.391), 일본(.335), 태국(.334)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비교적 강한 반면 캄보디아(.254), 몽고(.195), 필리핀(.143)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특히 말레이시아(.088)에서 가장 약하였다. 이들 결과는 사람들을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사람들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Yamagishi and Yamagishi 1994).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신뢰를 보다 안정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결합하여 혼합지표를 구성하였다. 즉 두 문항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가장 높고 두 문항에 모두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가장 낮으며 두 문항 어느 하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중간이라 간주한 것이다.

일반화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중분석에 앞서 각 영향요인과 일반화된 신뢰 간 관계에 대한 단순상관 분석을 국가별로 시도하였고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둘 간의 관계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 군을 보면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 가입한 단체 수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일반화된 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유일하

계 대만에서만 가입한 단체 수나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한편, 일본, 태국, 몽고, 캄보디아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와 관계가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형태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몽고, 캄보디아의 경우 단체가입은 관계가 있으나 사회접촉을 그렇지 않은 반면 태국의 경우는 반대로 사회접촉은 관계가 있으나 단체가입은 그렇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관변단체가 지배적인 싱가포르의 경우로 가입한 단체 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질 변수 군을 보면 10개국 중 6개국에서 정부의 질 3개 변수 모두 일반화된 신뢰와 관계가 있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몽고,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가 덜 부패하고 더 준법하고 투명하며 덜 차별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리고 4개국에서는 정부의 질 2개 변수가 일반화된 신뢰와 관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가 덜 부패하고 더 준법한다고 인식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의 비차별성에 대한 평가는 일반화된 신뢰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지는 못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준법성에 대한 평가는 관계가 없지만 정부가 덜 부패하고 차별적이지 아닐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의외인 것은 계층 간의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태국의 경우 정부가 계층이나 소수민족에 대해 덜 차별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제도의 질 변수 군을 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문책제도의 3개 변수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문책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반면 그 밖의 나라들의 경우 문책제도의 질과 일반화된 신뢰 간의 관계는 부분적이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견제와 균형(수평적 책임성)은 대인신뢰와 무관하나 선거공정성이나 수직적 책임성과 같은 국민이 직접 관련된 문책제도의 경우 대인신뢰와 관계가 있었다. 대만의 경우에는 수평적 문책제도만, 몽고와 필리핀의 경우 공정선거제도만, 캄보디아의 경우 수직적 문책제도만 일반화된 신뢰와 긍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평적 문책제도는 긍정적 관계, 수직적 문책제도는 부정적 관

계로 혼합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외인 것은 탁신 탄핵 추진과 관련하여 정치적 양극화 상태에 있었던 태국의 경우 민주적 문책제도(수평적 및 수직적)가 작동한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수평적 문책제도는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전술한 정부의 질 분석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퍼즐로 추가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2> 일반화된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 및 국가제도 변수 간 관계: 국가별 분석

	민주주의						권위주의			
	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사회적 상호작용										
단체가입	.109**	Ns	.067**	.077**	Ns	Ns	Ns	Ns	-.102**	.081**
사회접촉	Ns	Ns	.145**	Ns	Ns	Ns	.068*	Ns	Ns	Ns
정부의 질										
반부패성	.111**	.077**	.112**	.119**	.137**	.113**	Ns	.081**	.116**	.072*
준법성	.142**	.081**	.130**	.093**	.137**	.091**	.071*	.080**	.099**	Ns
비차별성	.109**	Ns	.064*	.077**	Ns	.187**	-.073**	.073*	.120**	.144**
문책제도의 질										
선거 공정성	.111**	.108**	Ns	.091**	Ns	.086**	Ns	Ns	.102**	Ns
수직적 책임성	.073**	.108**	.092**	Ns	.111**	Ns	-.122**	Ns	.108**	.060*
수평적 책임성	.118**	.090**	Ns	Ns	-.057*	Ns	-.083**	-.145**	Ns	Ns

주: 수치는 Pearson's 상관계수. *p<.05. **p<.01.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요약하면 일반화된 신뢰의 영향 요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보다는 국가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제도 가운데서도 “좋은 정부”의 존재가 정부를 문책할 수 있는 선거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작동보다 더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일당독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대인신뢰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에 포함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다. <표 3>은 사회적 상호작용 변수, 정부의 질 및 문책제도의 질 변수 모

두를 포함한 통합모형을 사용해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변수 군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sq 값을 보면 기존의 연구가 강조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국가제도의 질이 동아시아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의 변이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반화된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적 및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 설명에서 강조된 변수들을 보면 단체 단수가입의 경우 10개 국가 중 단지 1개국(필리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복수가입의 경우 10개 국가 중 4개 국가(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복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단체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반화된 신뢰수준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사회단체의 구성이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가입한 많은 단체들이 주로 관변단체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전혀 의외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수가입이 교량적 자본보다 결속적 자본을 더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단체 복수가입이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일본과 태국의 경우 무가입자와 단수가입자 간 차이가 없었지만 무가입자와 비교해 복수가입자의 신뢰수준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다.⁸⁾ 이는 이들 국가의 경우 낮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교차적 연결망의 잠재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또 다른 변수인 사회 접촉은 10개국 중 단지 2개국(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으로 사회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반화된 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지 않아 사회자본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아시아에서는 폭넓게 발견할 수 없었다.⁹⁾

둘째, 정부의 질 설명에서 강조된 변수들을 보면 반부패성은 10개국 중 3개국

8) 대만과 몽고의 경우 복수단체가입은 0.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

9) 태국의 경우 0.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신생민주주의로 부패통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국가들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부패통제가 비교적 성공적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의 반부패성이 일반화된 신뢰를 높이는데 주목할 만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준법성은 10개국 중 6개국(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불편부당성은 10개국 중 4개국(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외인 것은 지역 및 계층으로 분열된 태국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가 불편부당하다고 인식할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분석결과는 정부의 질과 관련된 설명변수들 가운데서는 준법성이 가장 일관되고 가장 공통적인 영향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문책제도의 질 설명에서 강조된 변수들을 보면 선거 공정성은 10개국 중 단지 3개국(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와 정부를 직접 연계시키는 수직적 책임성은 10개국 중 단지 2개국(일본, 말레이시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방향조차 부정적이었다. 국가제도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수평적 책임성은 10개국 중 단지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리핀의 경우는 방향이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질과 문책제도의 질을 비교해보면 일반화된 신뢰의 생성에 중요한 것은 “좋은 정부” 특히 준법정부의 존재 여부이며 그러한 정부를 담보할 수 있는 문책기제의 작동 여부는 덜 직접적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 중 성별 차이는 10개국 중 4개국(대만, 몽고,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은 모두 긍정적이어서 사회참여가 활발한 남자가 여자보다 일반화된 신뢰가 더 높았다. 연령은 10개국 중 3개국(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은 모두 긍정적이어서 나이가 들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교

육수준은 10개국 중 4개국(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방향은 혼합적인데 일본과 대만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오히려 낮았다는 점이다. 끝으로 소득수준은 10개국 중 3개국(대만, 몽고, 캄보디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대만과 몽고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높았다. 이처럼 교육과 소득의 영향이 간헐적이어서 신뢰가 승자 특권이라는 주장의 증거는 동아시아에서 광범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제도 중심 시각의 설명력은 사회적 상호작용 시각의 그것보다 다소 높지만 두 시각 모두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일반화된 신뢰의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민주주의로 간주되는 나라들 대부분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련 변수들보다 정부의 질 혹은 문책제도의 질 관련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인 일본의 경우 정부의 준법성과 불편부당성 및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수직적 책임성 등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신생민주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외의 민주주의는 한국, 몽고, 대만으로 한국과 대만의 경우 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몽고의 경우 제도의 질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 국가제도의 질이 그다지 일반화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직적 책임성은 오히려 일반화된 신뢰를 낮추었고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의 질 관련 3개 변수 가운데 하나만이 유의미하지만 약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적 상호작용 및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다중회귀분석

	민주주의					권위주의				
	일본	한국	대만	몽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사회적 상호작용										
단체가입(단수)	.068	.008	.041	.014	-.025	.093*	.017	.013	-.082	.068
단체가입(복수)	.134**	.069	.088	.149	.109	.008	.254***	-.178*	-.217*	.001
사회접촉	.027	.016	.050**	-.009	.017	.004	.040	.034*	-.018	.018
정부의 질										
반부패성	.021	.031	.015	.032	.062**	.033*	.048*	.014	.066	.019
준법성	.048**	.006	.035*	.026	.056*	.027*	.046*	.017	.069*	-.006
비차별성	.039**	.002	.026	.020	.004	.055***	-.053*	.009	.023	.036*
문책제도의 질										
선거의 공정성	.040*	.048*	-.002	.012	.035	.038**	-.004	.006	.035	.012
수직적 책임성	.042*	.037	-.012	.003	-.045	.003	-.006	-.082***	.034	-.025
수평적 책임성	-.013	.044	.037	.003	.098***	-.034*	-.088***	-.019	.047	.024
인구사회학적 통제										
성별(남자)	-.046	-.049	.096*	.123**	.025	.113**	.064	.187***	.010	.002
연령	.062***	.024	-.035	.030	.074**	-.017	.021	.029	-.006	.103***
교육수준	.106***	.045	.124**	.019	-.120**	.008	-.093*	-.010	.048	-.046
소득수준	.041	.022	.167***	.084**	-.057	-.032	.067	.000	-.080	-.045*
R-sq	.072	.029	.104	.045	.089	.072	.079	.075	.061	.076
(N)	(1,580)	(977)	(1,224)	(965)	(883)	(1,076)	(782)	(872)	(557)	(961)

*p<.05; **p<.01; ***p<.001.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III.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가입이나 사회접촉 등 사회자본론이 강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반화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설사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흥미롭게 영향을 방향이 때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론이 아시아의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Park 2011). 사회적 상호작용과 비교해 보다 일관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좋은 정부”, 특히 준법 정부의 존재로 나타났다. 그러한 정부를 담보해주는 정치적 문책제도, 특히 선거 제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직적 혹

은 수평적 문책제도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논의에서 강조된 것처럼 정부가 법을 준수해야 사회적 삶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그래야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신뢰해도 리스크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준법성(투명성 포함)은 법의 지배와 관련되는 특성으로 이러한 발견은 법의 지배, 즉 치자의 행동을 구속시키는 사회규칙 체계의 구축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제도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VI.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인 일반화된 신뢰, 즉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확대된 신뢰의 근원에 초점을 두고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와 국가제도의 질이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회자본론은 개인들이 단체와 비공식 모임 등 사회적 네트워크에 관여함으로써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과급효과가 있어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확대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국가 중심 시각은 특정적 신뢰가 일반화된 신뢰로 확대되는 과급효과 기제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낯선 사람들의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구축함으로써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서 단체가입이나 사회접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준과 정부 및 문책제도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일반화된 신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삼아 각 이론이 반영하는 미시수준의 관찰함의에 초점을 두었고 신뢰가 외생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에도 내생변수로만 간주해 설명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수준 및 모형설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에 유념하면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모형의 설명력이 낮아 개인수준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국가제도의 질이 동아시아에서 일반화된 신뢰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인과기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론의 주장과 달리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부 국가에서 발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체 미가입자와 비교해 단수단체 가입자들의 신뢰 수준이 더 높지 않은 반면 복수단체 가입자들의 신뢰 수준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복수단체 가입자들은 가교적 네트워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지만 단수단체 가입자들은 결속적 네트워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 낯선 사람들에게는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Putnam and Goss 2002).¹⁰⁾ 한편 정부의 준법성은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일관되게 기여하지만 이러한 정부를 간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문책제도는 공정성거제도만 제외하고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정부”의 존재가 일반화된 신뢰에 기여한다는 발견은 행위자들이 제도 규범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 신용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反부패성, 준법성(투명성 포함), 非차별성의 규범은 모두 법의 지배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천하는 제도적 행위자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동료시민들에 신뢰를 확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인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단체의 결성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충실하고 준법행태를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반화된 신뢰의 형성에 기여하려면 시민들이 정부가 한 약속이 신뢰할만하다는 기대를 갖도록 정부행동을 스스로 법에 구속시키고 자의적이고 비예측적인 권한 행사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증거는 준법정부(law-abiding government)의 존재가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신뢰를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조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10) 이러한 점에서 단체가입과 활동이 일반화된 신뢰를 촉진할 것이라는 가정은 단체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Brehm, John &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ohen, Jean. 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lhey, Jan, Kenneth Newton & Christian Welzel.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Gambetta, Diego. 1988. “Can We Trust Trust?” in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Hardin, Russell. 2001. “Conceptions and Explanations of Trust” in Karen S. Cook (ed.), *Trust in Societ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ooghe, Marc & Dietlind Stolle. 2003. “Introduction: Generating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nack, Stephen &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88.
- Levi, Margaret. 1998. “A State of Trust,” in Valerie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 (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evi, Margaret & Laura Stoker.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 Levitsky, Steven & Lucan W. Way. 2010.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Hybrid Regimes After the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nnestad, Peter. 2008. "What Have We Learned About Generalized Trust, If Anything,"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413-36.
- Newton, Kenneth.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 Newton and Paul F.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 Offe, Claus. 1999. "How Can We Trust Our Fellow Citizens"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 Chong-Min. 2011. "Associations and Social Networks in Southeast Asia: Schools of Democracy?" in Aurel Croissant and Marco Bunte (eds.), *The Crisis of Democratic Governance in Southeast Asia* London: Palgrave Macmillan.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Putnam, Robert D. & Kristin A. Goss. 2002. "Introduction," in Robert D. Putnam (ed.), *Democracies in Flux: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Ackerman, Susan. 2001. "Trust, Honesty and Corruption: Reflection on the State-building Process,"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2(3): 526-570.
- Rothstein, Bo. 2005. *Social Trusts and the Problem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lle, Dietlin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Sztompka, Piotr.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de. 1956.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entor.
-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magishi, Toshio & Midori Yamagish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